



주간통일정세 2010-39(2010.09.20~09.26)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0-39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김정일, 인민내무군 취주악단 공연 관람(9/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내무군 여성취주악단의 공연을 관람
 - 중앙통신은 “조선인민내무군 여성취주악단은 공연무대에 취주악 ‘당은 장군님의 품’, 트럼펫 독주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금관4중주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올렸다”고 밝힘.
 - 통신은 김정일 위원장이 공연 관람을 마치고 공연활동에서 지침이 되는 과업을 제시했다고 소개했으나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이날 공연 관람에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최태복,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리병삼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현철해 대장 등이 동행

- **北, 당대표자회 28일 개최(9/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 준비위원회는 애초에 ‘9월 상순’으로 예고했던 44년만의 당대표자회를 오는 28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발표
 - 준비위는 “조선노동당 인민군대표회, 도(정치국) 대표회에서는 김정일 동지를 대표자회 대표로 높이 추대했다”며 “조선노동당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위한 조선노동당대표자회는 28일 평양에서 열리게 된다”고 밝혔다고 통신이 전함.
 - 그러나 당대표자회가 연기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음.
 - 준비위는 또 “대표회에서는 혁명적 대고조의 전투장에서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일꾼들이 대표로 선거됐다”면서 “대표회들은 김정일 동지를 중심으로 한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다시한번 힘 있게 과시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北김정일, 깜빡 조는 현상 반복(9/21, 자유아시아방송(RFA); 열린북한방송)**
 - 방송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달 중국 방문(8/26~30) 당시부터 5분 정도씩 깜빡 잠들었다가 깨는 현상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반복되는 건강 이상증세를 보였으며, 북한이 ‘9월 상순’ 개최를 예고했던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를 연기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보도
 - 방송은 ‘평안북도의 당 고위간부 소식통’을 인용, “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은 중국방문 당시였으며 동행한 북한 의료진과 중



국 의료진도 빨리 귀국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 권했다”면서 건강이상 증세와 관련해 “현기증이 심해 의자에 앉아 있다가도 몸을 가누지 못하는데다 5분 정도씩 깜빡 잠들었다가 깨는 현상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반복된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초기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치료하면 건강상태가 좋아져 대표자회에 참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고 그래서 회의 일정도 변경시키지 않았다”며 “하지만 노동당 대표자들이 모두 평양에 집결한 이후에도 호전될 것처럼 보이던 김 위원장의 이상증상이 지속됐고 회의장에서 졸거나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회의를 연기한 것”이라고 말함.
- 그는 당대표자회 연기 배경으로 권력암투, 후계문제 혼선 등 그간 제기됐던 여러 설에 대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을 당시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다”며 그 가능성을 부인
- 또 다른 평안북도 지방 간부도 고위층의 전언을 인용해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의자에만 앉으면 조는 증상을 보여 자칫 회의장에서 잠들까 봐 회의를 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함.
- 이 간부는 “지난 14일 북한당국이 지방 당대표들을 돌려보내면서 ‘항상 출발할 수 있도록 대기상태에 있으라’면서 ‘사건·사고가 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임.
- 한편 대북 단파라디오 ‘열린북한방송’은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 “김 위원장이 방중 이후인 지난 8일 새벽 호흡곤란을 일으켜 긴급처치를 받았다”면서 “원인은 뇌졸중 예방약 부작용으로 보이며, 당시 의료진은 앞으로 석 달이 고비라면서 최소 보름간의 휴식과 과도한 업무를 중단하라는 처방을 내렸다”고 전함.
- 소식통은 “이 때문에 원래 3박 4일로 치러질 예정이던 당대표자회가 하루로 단축됐다”고 말함.
- 방송은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 준비위원회가 밝힌 28일 개최도 김 위원장의 건강 회복 여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임.

● 北, 강석주 부총리·김계관 제1부상 승진(9/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핵협상과 대미외교를 도맡아온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내각 부총리에 임명
- 또 ‘6자회담’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도 외무성 제1부상에, 6자회담 북한 측 차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참사도 외무성 부상에 각각 임명
- 이에 따라 북한 외무성의 대미외교라인이 모두 승진

● 北신문, 노동당은 ‘김일성黨’(9/23,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고 김일성 주석의 당인 노동당에 유일 영도체계를 확립한 공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을 뿌리는 김일성 동지의 당”이라며 “장군님(김정일)께서 전당에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을 당 건설의 기본로선으로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셨다”고 밝힌 것으로 ‘우리민족끼리’가 전함.
- 신문은 이어 김 위원장이 제5차 당대회에서 김일성 주석의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사상’으로 명시토록 지시한 사례를 인용,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세우고 통일단결을 이룩한 것이 김정일 동지의 가장 큰 공로”라면서 “한 나라의 당을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당 안에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것을 김정일 동지가 실현했다”고 찬양

● 北황해도 당책임비서 ‘최룡해→박태덕’ 교체(9/25,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가 최룡해에서 박태덕으로 교체된 것으로 확인
- 조선중앙방송은 25일 황해북도 인민학습당 준공식에 참석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기존의 ‘최룡해’ 대신 ‘박태덕’을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로 소개
- 최룡해가 마지막으로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 직책으로 호명된 것은 지난 19일 연산군민발전소 준공식 보도에서임.
- 최 전 비서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난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에도 동행해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중앙당의 고위직으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음.
- 앞서 대북 단파라디오 ‘열린북한방송’은 지난 24일 “최룡해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가 오는 28일 열릴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핵심 요직인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고 보도
- 최룡해는 고 김일성 주석의 빨치산 동료였던 최현의 2남으로,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 노동당 다음으로 큰 조직이었던 청년동맹의 제1비서를 지냈으나 1998년 ‘청년동맹 비리사건’에 연루돼 평양시 상하수도관리소 당비서로 좌천됐다가 2003년 당 총무부 부부장(차관급)으로 재기한 뒤 2007년 황해북도 당비서로 발탁
- 한편 박태덕 신임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의 출신, 경력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음.

● 北김정일, 中가극 개작 지도…“북중문화교류 중요”(9/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가극 ‘량산백과 축영대’의 개작 사업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전함.
-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보도는 지난 20일 중앙통신이 인민내무군 여



성취주악단 공연을 관람했다고 전한 이후 6일만임.

- 김정일 위원장은 가극 '량산백과 축영대' 개작사업을 보고받고 창작 중인 가극을 직접 관람한 뒤 "우리 인민은 세계문화에 대해서도 더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소개
- 그는 이어 "귀중한 조(북)·중친선을 대를 이어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문화교류는 두 나라 인민의 친선을 증진시키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강조
- 북중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북한은 최근 중국의 무대작품을 재창작해 주민들에게 공연하고 있으며, 중국 고전인 '홍루몽'을 개작해 선보인 '피바다가극단'은 올해 중국에서 공연을 갖기도 함.
- '량산백과 축영대'는 남녀간의 애정을 소재로 한 월극(여성 배우들만 출연하는 형태의 지방극)으로 중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평가 속에 인기를 모으면서 동명의 영화가 제작되기도 함.
- 이날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에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 부장과 김기남·최태복 당 중앙위 비서가 동행

● 北통신 “당대표자들 평양 도착”…28일엔 열릴듯(9/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에 참가할 지방 대표자들이 26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이 통신은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에 참가할 대표자들이 26일 평양에 도착했으며, 당대표자회 준비위원회 일꾼들이 이들을 맞이했다”고 밝힘.
- 중앙통신의 이 보도를 볼 때 당초 '9월 상순'에서 늦춰진 '28일'에는 당대표자회가 열릴 것으로 보임.
- 북한은 당대표자회 개최 시점으로 예고했던 '9월 상순'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넘긴 뒤 지난 21일야 당대표자회 준비위원회 명의로 '28일 평양에서 연다'고 밝힌 바 있음.

● “北평북도 당 책임비서도 교체…권력재편 조짐”(9/26, 데일리NK)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임이 두터워 당 요직 기용이 예상되는 최룡해(황해북도 당 책임비서)와 김평해(평안북도 당 책임비서)가 최근 '보직 대기'에 들어가는 등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북한 내에서 권력 재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대북 인터넷매체 '데일리NK'가 26일 전함.
- 이 매체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인 김평해가 교체돼 평양에서 보직 대기중”이라면서 “평안북도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당 책임비서도 상당수 교체됐거나 교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힘.
- 이 매체는 또 “김평해는 1997년 평안북도 당 조직비서에서 책임비서로 승진한 이후 지난 13년간 같은 자리를 유지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현지지도를 수시로 수행하는 등 각별한 신임을 받았다”고 전함.



- 앞서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도 최룡해에서 박태덕으로 바뀐 것으로 25일 북한 조선중앙방송 보도에서 확인됐음.
- 대북 단파라디오 ‘열린북한방송’은 지난 24일 “최룡해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가 오는 28일 열릴 당 대표자회에서 핵심 요직인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고 보도했었음.
- ‘데일리NK’는 평양 출신 탈북자를 인용, “김평해와 최룡해는 김정일이 앞을 내다보고 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경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 “내각이나 중앙당 고위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함.
- 이 매체는 이어 “북한은 올해 지방당 간부를 평양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지난 6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락희(황해남도 당 책임비서)와 리태남(평안남도 당 책임비서)을 내각 부총리에 임명하는데 이어 각각 함경남·북도 당 책임비서로 있던 태종수와 홍석형을 6~7월 당 부장에 발탁했다”고 말함.
- 이 매체는 “지방당 책임비서의 연이은 교체는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지도부가 새롭게 꾸려질 것에 대비해, 중앙에 새로운 인력을 수혈하고 지방 조직을 정비하는 등 복합적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북한 권력 핵심부가 극도로 노쇠한 상황에서 비교적 젊은 60대 초반 인사들을 배치해 후계자인 김정인을 뒷받침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임.

■ 김정일동향

- 9/20 김정일, 조선인민내무군 여성취주악단 공연 관람(9/20, 중통)
-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최태복·김기남(당 비서), 리병삼(내무군 정치국장), 현철해(대장) 등

나. 군사

- “北, 병력 1만여명 참가 최대규모 퍼레이드 준비”(9/26, 연합뉴스)
 - 북한군이 병력 1만여명과 미사일, 기갑, 포병 전력 등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 및 군사퍼레이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
 - 26일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이 대규모 국가급 행사 준비를 위해 지난 7월12일부터 평양 미림비행장으로 전개하기 시작한 병력 규모가 최대 1만 여명에 달하고 이들은 열병식 및 군사퍼레이드를 위한 예행연습 중인 것으로 파악
 - 북한군이 과거 열병식 등에 비해 2배가 넘는 병력을 동원한 것으로 미뤄 이번 행사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
 - 이에 당국의 한 관계자도 “현재 진행 중인 준비 상황으로 미뤄 행사 규모가 예년과 다른 대규모 수준”이라고 말함.
 - 또 북한군은 대규모 병력과 함께 미사일 및 기갑부대, 포병부대 전력



- 등도 다수 미립비행장으로 집결시키는 것으로 알려짐.
- 대북 소식통은 “전개된 장비 가운데는 단·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차량탑재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방사포, 자주포, 전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동식 발사대로 미뤄 이미 실전 배치됐거나 개발된 단·중거리 미사일이 행사 당일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 된다”고 말함.
 - 북한 군인들이 10일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음.
 - 당국은 미사일 발사대 종류 등으로 볼 때 이번 행사에 단거리인 KN-02(사정 120km) 미사일과 중거리 노동미사일(사정 1천200km), 신형 중거리 미사일(사정 3천km) 등이 동원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 또 다른 당국자는 “장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미사일 관련 장비들도 나와 있다”고 전함.
 - 이와 관련, 자유북한군인연합회 소속의 한 탈북자는 “보통 북한군의 열병식과 군사퍼레이드는 인민무력부 행사국이 주관한 가운데 병력은 5천여명 정도 참가한다”며 “이번 행사 준비 규모로 미뤄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참관하는 ‘1호 행사’로 보이며 행사 준비도 국방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 같다”고 말함.
 - 그는 “행사 규모로 미뤄 투입되는 비용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함.
 -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이런 행사 준비가 이달 28일 당대표자회의에 이어 다음 달 10일 개최되는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식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이달 28일 당대표자회의와 10월 노동당 창건일로 이어지는 내부 정치일정과 관련해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행사를 준비 중인 것은 내부적으로는 결속과 자긍심을 불어넣고 대외적으로는 노동당의 건재와 군사적 자위 능력을 과시한 무력시위 차원으로 분석된다”고 말함.

다. 사회·문화

● 北, 추석날 수해 복구 선전(9/22,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은 22일 “8월과 9월초의 폭우 및 태풍의 영향으로 북한 일부 지역에서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며 “평안북도과 강원도, 자강도, 황해남도 등의 피해 지역에서 복구사업이 힘 있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도
- 매체들은 해당 지역에서 수해 복구 지휘부가 마련돼 시멘트와 가공된 강철을 확보해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전함.
- 강원도와 자강도에서는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택과 공공건물을 다시 짓는 한편 파괴된 철길과 산사태로 끊어진 도로를 이었으며 전력망과 통신, 상수도 시설도 복구했다고 밝힘.



나. 6자회담(북핵)

● “中 통한 北 핵 기술 수입 우려”(9/25, 미국의 소리(VOA))

- 북한이 중국의 위장기업을 통해 유럽 기업들로부터 핵 기술을 사들이는 방식의 핵 밀거래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전함.
- 미국의 핵군축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지난 23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 밀거래는 국가적으로 운영되며 핵 물질보다는 핵 기술을 거래하고 있다”면서 “파키스탄의 핵 기술 밀거래망이 적발된 뒤 이에 필적할만한 밀거래 조직은 북한뿐”이라고 말함.
- 그는 “중국에는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어 거래의 투명성 확보가 어렵고, 북한의 밀거래 조직은 이를 이용해 중국에서 평범한 기업으로 위장해 핵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접근 한다”면서 “미국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중국과의 다른 주요 현안들에 밀려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
- 올브라이트 소장은 “각국의 핵 기술 기밀분류 기준이 달라 몇 단계만 거치면 핵 기술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허점”이라면서 “밀거래 조직 적발을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
- 그는 핵 밀거래 제재방안에 대해 “중국에는 핵 밀거래의 철저한 단속이 결국 중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고, 북한에는 핵 관련 협상 과정에서 핵 밀거래 활동 포기를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3. 대남정세

● 北, 실무접촉에 ‘금강산관광 일꾼’ 보낼 예정(9/20, 연합뉴스)

- 북측이 20일 이산가족상봉 장소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던 24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 금강산 관광재개와 관련된 ‘일꾼’을 보내겠다는 통지문을 보냈으며, 우리측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
-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북측 조선적십자회는 이날 오후 대한적십자사(한적) 총재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24일 실무접촉에서 금강산 상봉장소 문제를 별도로 협의하기 위해 지난 2월 관광재개 실무접촉에 나갔던 관계 일꾼 2명을 내보내려고 하니 남측에서도 그에 상응한 관계자들이 함께 나와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한적과 정부의 대응이 주목됨.

● 北매체, ‘전쟁비축미 100만t 보유’ 발언 비난(9/21, 우리민족끼리)

- 사이트는 ‘북한 전쟁비축미 100만t 보유’ 발언과 관련해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동족 사이의 대결을 고



취시키기 위한 매우 불순한 모략”이라고 비난

- 사이트는 ‘고약한 속심(속셈)을 드러낸 모략적 망발’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북한이 전쟁 비축미로 무려 100만t을 보유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사실을 거론, “괴뢰패당의 심보는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를 비틀고 인도주의 사업을 못하게 하여 현 대결국면을 계속 유지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비난
- 이어 “그들은 내외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마지못해 하는 눈곱깨기만한 수해물자 제공에 대해서조차 ‘투명성’이요, ‘군사전용’이요 하고 까박(트집)을 붙이면서 누추하게 놀아내고 있다”고 말함.
- 또 “우리의 남조선어선 ‘대승’호 송환조치와 추석을 계기로 흩어진 가족친척 상봉(이산가족상봉)을 진행할 데 대한 제의에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킬 줄 모르는 이런 무례 무도한 패당과 마주앉아 인도주의 사업을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라면서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모독하는 것은 반인륜적 야만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

● 남북, 제2차 이산가족 실무접촉 시작(9/24, 연합뉴스)

-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두 번째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이 24일 오전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시작
-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측 대표단이 오전 8시 45분께 도라산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가 오전 10시 15분부터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북측과 실무접촉에 들어갔다”고 밝힘.
- 당국자는 “북측이 요구한 별도의 협의가 아닌 만큼 북측이 보내겠다는 ‘금강산일꾼’은 오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함.
-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실무접촉에는 우리 측에서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인 김의도 한적 남북교류실행위원(수석대표)과 김성근 한적 남북교류팀장이, 북측에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박용일 단장과 박형철 대표가 각각 나선 것으로 전해짐.
- 북측은 지난 20일 조선적십자회 명의로 한적 총재에게 보낸 통지문에서 금강산 상봉장소 협의를 위해 지난 2월 관광재개 실무접촉에 나갔던 관계자 2명을 24일 실무접촉에 보낼 방침이라며 남측도 상응하는 관계자가 나와 달라고 요구
- 한적은 이에 대해 전날 오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기존 대표단 2명이 당국의 위임을 받아 참가할 것이라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음.
- 김 수석대표는 출발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북측과 장소에 대한 이견을 조율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조기에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함.
- 그는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금강산관광 재개와 연계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회담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곤란하다”며 “일단 상봉장소 문제 위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음.



- 양측은 앞서 지난주 실무접촉에서 상봉 일정(10월 21~27일)과 생사확인 의뢰 등 사전 준비절차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상봉장소와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음.

● 北통신, “南, 이산상봉 연기 제안”(9/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사실을 전하면서 남측이 이미 합의했던 이산가족상봉 일정을 연기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힘.
- 중앙통신은 “남측은 지난번 접촉에서 쌍방이 합의한 상봉날짜와 명단교환날짜 등을 모두 뒤집으며 늦잡자고(연기하자고) 하는가 하면 상봉장소문제를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합의를 채택할 수 없다고 고집했다”고 주장
- 남북 양측은 지난 17일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내달 21일부터 27일까지 갖기로 의견접근을 이뤘으며 이 일정에 따르면 25일 상봉 대상자 300명의 명단이 담긴 회보서를 교환해야 함.
- 정부 당국자는 상봉일정 연기 제안에 대해 “생사확인 등 상봉이 이뤄지기까지 1개월 정도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만큼 24일 접촉에서 상봉 합의가 도출되지 못해 앞으로 상봉 일정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
- 통신은 또 “금강산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를 상봉장소로 하는 문제를 관계자들 사이에서 협의하자고 하자 남측은 면회소 주장을 철회하고 상봉장소를 다른 곳으로 하자고 하는 등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했다”고 비난
- 이번 접촉에서 정부는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상봉행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면회소를 사용할 수 없다면 북측이 구체적인 상봉장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나 북측은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중앙통신은 “쌍방은 10월1일 개성에서 상봉장소 문제와 관련한 해당 당국관계자들 사이의 접촉과 적십자 실무접촉을 계속 하기로 했다”고 덧붙임.

● 北, 한미 연합훈련에 또 ‘불벼락’ 위협(9/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실시될 예정인 한미연합 대 잠수함 훈련에 대해 “우리는 대화를 바라지만 우리를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선 추호도 용서치 않고 무자비한 불벼락을 안길 것”이라고 위협
-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서기국 ‘보도’를 통해 “미국과 괴뢰패당이 북침 전쟁연습에 계속 매달리는 것은 조선반도 긴장완화 노력과 북남관계 개선 기운에 찬물을 끼얹고, 대결을 격화시키기 위한 군사적 도발”이라며 이같이 밝힘.
- 조평통은 또 “괴뢰패당이 우리와 마주앉아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



한 적십자 대화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미국과 전쟁연습 소동을 벌리는 것은 대화 상대방에 대한 우롱이고 도전”이라면서 “대화와 전쟁연습은 양립될 수 없는 만큼 대화냐 대결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한·미·일 유엔총회서 6자회담 입장 조율(9/26)

- 한·미·일 3국의 한반도담당 고위당국자들이 제65차 유엔총회 기간에 회동을 갖고 북핵 6자회담에 대한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각) 유엔 본부에서 한·미·일 3자회담과 한·미 양자회담을 잇따라 갖고 그동안 대북 정책노선을 다시 점검하고 6자회담 재개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 이 당국자는 “한·미·일은 6자회담 재개의 여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진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전체 대화과정에서 남북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6자회담과 관련해 3자가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 다른 나라들과도 긴밀히 협조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 3자회담에는 미국측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성김 6자회담 특사, 일본측에서 기타노 미쓰루(北野充)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이 각각 참석했다. 일본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중·일간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논쟁 때문에 일정이 맞지 않아 3자회담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中통한 北핵기술 수입 우려”<VOA>(9/25)

- 북한이 중국의 위장기업을 통해 유럽 기업들로부터 핵 기술을 사들이는 방식의 핵 밀거래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전했다.
- 미국의 핵군축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지난 23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 밀거래는 국가적으로 운영되며 핵 물질보다는 핵 기술을 거래하고 있다”면서 “파키스탄의 핵 기술 밀거래망이 적발된 뒤 이에 필적할만한 밀거래 조직은 북한뿐”이라고 말했다.
- 그는 “중국에는 수 많은 외국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어 거래의 투명성 확보가 어렵고, 북한의 밀거래 조직은 이를 이용해 중국에서 평범한 기업으로 위장해 핵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접근한다”면서 “미국



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중국과의 다른 주요 현안들에 밀려 제대로 다루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올브라이트 소장은 “각국의 핵 기술 기밀분류 기준이 달라 몇 단계만 거치면 핵 기술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허점”이라면서 “밀거래 조직 적발을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음. 그는 핵 밀거래 제재방안에 대해 “중국에는 핵 밀거래의 철저한 단속이 결국 중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고, 북한에는 핵 관련 협상 과정에서 핵 밀거래 활동 포기를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北 새 섭정세력과 그랜드 바긴 해야”(9/23)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섭정세력이 들어서게 되면, 한국과 미국 등 나머지 6자회담 당사국들은 적절한 시점에 섭정세력과 일종의 ‘그랜드 바긴(일괄타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동북아정책연구실장은 지난주 펴낸 ‘핵을 지닌 북한의 도전, 어두운 그림자 속의 한줄기 희망’이라는 보고서에서 ‘포스트-김정일’의 권력구조는 삼남 김정일의 일인독재가 아니라 섭정형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토대로 이같이 제안했음. 부시 실장은 “북한의 후계구도와 관련해 한 가지 분명해 보이는 것은 권력형태가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라며 “한국전쟁 이후 일관되게 유지돼 왔던 일인독재는 계속되지 않고 섭정이 들어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음.
- 부시 실장은 북한의 새로운 권력과의 대응방안과 관련, “본질적으로 6자회담은 일종의 그랜드 바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그대로 섭정세력에게 제시해야만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북한이 현재의 막다른 골목에서 탈출해 정권의 생존확률을 높이는 것이라는 점을 섭정세력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음. 이어 그는 “그러나 실질적인 그랜드 바긴은 점진적 과정을 통해 추구돼야 하며, 그것이 북한에도 가장 적절한 일이 될 것”이라며 북한과 한·미·일 사이에 상호불신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단 한차례의 결정적인 협상으로 그랜드 바긴을 견인하려는 것은 양쪽 모두에 위협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 또 그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보다는 압박을 가하는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면서 “이는 현재와 미래의 북한 지도부에 대해 북한이 현행 정책을 고수한다면 작금의 곤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압박의 강도와 관련,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압박만을 가하게 되면 북한 지도부에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시도하려고 한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만큼 압박과 인센티브를 적절히 결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음.
- 부시 실장은 이어 “단기적 관점에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은 일정 수준의 혼란에 대응할 준비도 갖춰야만 한다”며 “김정일이



나. 미·북 관계

● 백악관, 北비핵화 의무준수 요구(9/22)

- 미국은 21일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하고 싶다면 구체적 행동들을 하라고 북한의 행동변화를 거듭 촉구했음.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8일 개최될 예정인 북한의 당대표자회를 통해 권력승계가 이뤄질 경우 북한과의 재협상 기회가 열릴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 답변을 피한 채 “(협상)테이블로 되돌아오고 그들이 동의한 의무들을 준수하는 것은 북한의 권한 내에 있다”고 밝혔음.
- 기브스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이 있다”면서 “가장 쉬운 것은 그들이 동의했던 의무들을 단순히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브스 대변인은 또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주 유엔총회 참석 기간에 북한과 이란 문제 등도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당대표자회 개최를 앞둔 미국의 기대를 묻는 질문에 “개최 날짜는 알고 있지만 그 이상은 정말 다른 정보를 가진 것이 없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음. 하지만 그는 “북한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그들의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6자회담으로 되돌아오려는 그들의 의지를 보여줄 구체적 행동들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 중·북 관계

● 北김정일, 中가극 개작 지도..“북중문화교류 중요”(9/26)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가극 ‘량산백과 축영대’의 개작 사업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전했다.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보도는 지난 20일 중앙통신이 인민내무군 여성취주악단 공연을 관람했다고 전한 이후 6일만임. 김정일 위원장은 가극 ‘량산백과 축영대’ 개작사업을 보고받고 창작중인 가극을 직접 관람한 뒤 “우리 인민은 세계문화에 대해서도 더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소개했음.
- 그는 이어 “귀중한 조(북)·중친선을 대를 이어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문화교류는 두 나라 인민의 친선을 증진시키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북중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북한은 최근 중국의 무대작품을 재창작해 주민들에게 공연하고 있으며, 중국 고전인 ‘홍루몽’을 개작해 선보인 ‘피바다가극단’은 올해 중국에서 공연을 갖기도 했음. ‘산백과 축영대’는 남녀간의 애정을 소재로 한 월극(여성 배우들만 출연하는 형태의 지방극)으로 중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평가 속에 인기를 모으면서 동명의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음.
- 이날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에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 부장과 김기남·최태복 당 중앙위 비서가 동행했음.



● “중개혁개방 좋다더니?”·北신문 ‘주체경제’ 역설(9/24)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 북한의 개혁개방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외세의존을 배척하는 북한식 ‘주체경제’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나서 주목됨. 노동신문은 지난 18일 ‘주체화는 우리 경제 부흥과 비약의 기치’라는 제목의 기명 논설에서 “남에게 빌어먹는 절름발이 경제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처럼 큰 죄악은 없다”며 “외세 의존에서 살길을 찾는 것은 후대야 어찌 되건 자기 세대만 잘 살아보자는 이기적인 관점의 발현”이라고 주장했다.
- 이 신문은 또 “주체화의 원칙이 오늘처럼 시대적 보편성을 가지고 전면에 부각된 때는 일찍이 없었으며 자기나라 자원의 개발, 이용에 힘을 집중하는 것은 현시대 경제발전의 추세”라면서 “우리의 무진장한 자원을 적극 개발하면 세대를 이어가며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경제강국 건설에 필요한 자금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북한이 주체식 자립경제를 표방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나 노동신문의 이 논설은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듯한 김 위원장의 방중 발언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 김 위원장은 지난달 하순 방중 기간 가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빠른 발전을 이룩해 어느 곳이든 생기가 넘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음. 노동신문의 논조는 김 위원장의 이 발언으로 북한 내부에 개혁개방 기대감과 외세의존 심리가 지나치게 확산돼 자칫 김정은 후계구도 구축 등 향후 정책 노선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경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27일부터 닷새간 서해 대잠훈련(9/24)

- 한국과 미국은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닷새간 일정으로 서해상에서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가 24일 밝혔다. 이달 5~9일 예정됐다가 태풍 ‘말로’의 북상으로 연기된 이번 훈련은 대북 억제 메시지와 함께 총체적인 연합 대잠수함 전 능력 및 상호운용성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음.
- 서해 격렬비열도 등 서해상의 우리 군 작전구역에서 진행되는 훈련에는 우리 측에서 한국형 구축함(KDX-II) 등 구축함 2척과 호위함 및 초계함 각 1척, 제6항공전단의 P-3C 초계기, 잠수함 등이 참가함. 미국은 유도탄 구축함인 존 메케인함(DDG-56)과 피츠제럴드함(DDG-62), 3천200t급 대양감시함(해양조사선)인 빅토리어스함(T-AGOS 19) 등을 파견함. 빅토리어스함은 광범위한 지역의 해저



탐색 능력을 갖추고 있음.

- 존 메케인함은 작년 6월 말 불법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된 북한 선박 강남1호를 추적한 바 있으며 함장은 한국계 '제프리 J 김' 중령이 맡고 있음. 피츠제럴드함과 함께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전진 배치되어 있음. LA급(7천900t급) 고속공격형 잠수함과 제9초계 비행대대(VP-9)의 P-3 오라이온 초계기 등도 참가할 예정임.
- 제9초계 비행대대는 하와이 카나오헤 미 해병대 기지에 주둔하고 있음. 이번 훈련에는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는 참가하지 않음. 조지 워싱턴호는 10월 말 서해에서 진행되는 항모강습단 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 서해 대잠훈련은 지난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동해상에서 실시한 '불굴의 의지' 훈련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연합해상훈련이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대잠수함전 훈련에서는 적의 잠수함 침투에 대비한 전술과 기술, 대응 절차를 집중적으로 연습할 계획"이라며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에는 현장에서 격멸하는 대잠수함 전투태세를 완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 병력 1천 700여명도 훈련에 참가하며 고난도의 자유공방전훈련과 잠수함 추적 훈련 등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 한편 한미 군당국은 대잠훈련을 앞두고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북한군은 당 대표자회 개최 등과 관련해 '특별경계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있음.

● 커크, 한미FTA 쟁점해소 방침 재확인(9/24)

-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유용성을 강조하면서 현안 해소에 주력할 방침임을 거듭 확인했음. 커크 대표는 이날 서비스산업계 주최 행사에 참석, "우리는 한미 FTA의 미해결 문제들을 해소하고 싶다"면서 "한미 FTA는 주요 서비스산업 전체에 걸쳐 시장접근을 확대하는 약속들을 갖고 있다"고 밝혔음. 그는 "한국의 서비스시장은 거의 5천600억 달러 규모"라면서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과의 양자교역은 이미 연간 21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다"고 전했다.
- 그는 "한미 FTA의 약속들은 미국 서비스 제공업자들 및 서비스산업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들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서울에서 열릴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 때까지 미해결 쟁점들을 해소하고, 이어 수개월 내에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오바마, 서울수복 기념행사에 美대표단 파견(9/22)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는 27~28일 서울에서 열릴 '9.28 서울수복 기념행사'에 파견할 미국 대표단을 지명했다고 백악관이 21일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에릭



신세기 미 보훈부 장관이 대표단을 이끌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표단에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와 존 맥휴 육군장관, 앤드루 샤피로 국무부 정치군사담당 차관보 등이 포함됐다.

- 오바마 대통령이 6.25전쟁 기념행사 중 하나로 열릴 9.28 서울수복 기념행사에 미 대표단을 파견키로 한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 의지를 대내외에 재확인하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됨. 우리 정부는 매년 10월 1일 개최했던 국군의 날 행사를 서울수복 기념행사와 통합해 오는 28일 성대히 거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음.

나. 한·일 관계

● 한·일 “총리담화 후속이행” 의견일치(9/23)

- 제65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신각수 외교통상부장관 직무대행은 22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 誠司)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혔다. 양국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발표된 8.10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담화 발표를 평가하고 후속조치 이행 등 구체적 실천을 통해 양국이 새로운 한·일관계 100년을 열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음.
- 특히 우리측은 조선왕실의궤 등 도서반환과 사할린한인 문제, 유골 봉환 문제 등 과거사 현안의 진전을 위한 일본측의 성의있는 대응을 요청했으며, 일본측은 총리담화에 따라 착실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양국은 또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6일 처음 개최된 한·일 FTA 국장급 협의를 통해 실질적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음. 이와 관련, 우리측은 부품소재 전용공단의 최근 현황을 설명하고 일본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일본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음.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을 요청했으며 우리측은 양국이 편리한 시기에 방일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차원의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혔음.
- 양측은 이와 함께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핵문제 현황을 평가하고 6자회담 문제를 포함한 향후 대응방안을 폭넓게 논의했음. 양측은 6자회담이 재개되려면 북한이 행동으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등의 태도변화가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으며 6자회담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다. 미·중 관계

● “美, 中 상대 ‘비공식 외교’ 재개” <IHT>(9/24)

- 위안화 환율 절상 등을 놓고 미-중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과거처럼 ‘비공식 외교’로 중국과 접촉, 갈등 해소를 꾀하고



있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이 24일 보도했음. 신문은 복수 소식통의 전언을 인용,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달 초 토머스 도닐런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과 로런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안보당국자 여러 명을 비밀리에 베이징으로 보냈다고 이같이 전했다.

- 오바마 정부는 집권 이후 천안함 사태 등과 관련한 대(對)북한 접근 법이나 이란 핵개발 제재, 위안화 환율 절상,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문제 등을 놓고 중국 정부와 내내 불협화음을 빚어 온 터였음. 특히 최근 위안화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 의회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저평가된 위안화에 상계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논의하는 등 양국 간 이 문제에 관한 이견조율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임.
- 이와 관련, 미 정부의 한 안보당국자는 과거 헨리 키신저,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등 전직 외교관들도 비정규 경로로 중국과 접촉했음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벌써 이런 방식을 취했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음. 오바마 대통령 자신이 지난해 초부터 이미 6차례나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지만, 2대 강대국(G2)로 올라선 중국과 관계를 바로잡으려면 이같은 비공식 외교 루트로 여건을 다질 필요성이 절실했다는 뜻임. 중국으로서도 차기 NSC 보좌관이나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물망에 오르는 도닐런 부보좌관이 방중했다는 사실을 가변이 여기지는 않은 듯 보임.
- 이번 비공식 접촉이 구체적인 성과를 많이 내진 못했지만, 애초에 양국 간 장기적인 공통 목표를 공유하려는 목적이 컸던 데다 중국 측도 올해 초보다는 더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이는 지금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UN) 총회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후 주석 간 회담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귀결됐다고 IHT는 분석했음.
- IHT는 “유엔에서 미-중 외교관계가 어렵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의 말을 전하면서, 지금이 “G2의 등장”이라며 불과 1년 전 환호받은 협력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느냐를 두고 (미국과 중국) 양국이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오바마, 中 총리에 “환율문제 더 노력” 촉구(9/24)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국은 위안화 환율 문제로 발생한 미국과의 긴장관계를 풀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고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이 밝혔다.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원자바오 총리와 회담을 갖고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지적했음.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날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와 무역마찰 재현 조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두 시간 동안의 회담에서 환율 문제가 주요한 의제였으며 과거에 없었던 집중적이고 상세한 논의가 있었다고 베이더 보좌관은 밝혔음.

- 이에 대해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이 환율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라는 점을 재차 밝혔다고 베이더 보좌관은 전했다. 중국 측은 회담 결과에 대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지 않았으나 원자바오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모든 의견 차이는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중국 측은 건설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음. 한편 양측은 회담후 공식 발표에서는 환율 등 걸려있는 문제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두 사람의 대화가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밝혔음. 양측은 두 나라가 세계 경제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문제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고 발표했다.
- 원자바오 총리는 이날 통역을 통해 “양측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의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비해 훨씬 컸다”고 말했음. 그는 또 “내년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건이 성숙되길 원한다”고 밝혔음.
-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과 중국과의 협력은 세계 안보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고 중국은 매우 뛰어난 파트너이며 금융위기를 다루는데 있어서 미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음.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 시작에 앞서 사진 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하면서 중국 지도자들이 경제와 핵 비확산, 아시아 안보 문제에서 역할을 잘해줬다고 평가했음.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경제 일선에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세계경제가 회복중에 있으나 균형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두 사람이 솔직한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음.
- 이번 회담을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일 중국이 위안화의 절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으며 중국 측은 이에 대해 위안화 절상 압력은 “현명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처사”라고 대응했었음.

● 원자바오 “환율 대폭 절상 근거없다”(9/23)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위안화 환율을 급속하게 절상할 근거가 전혀 없다”며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 정면 대응했음. 관영 신화통신은 원자바오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미중 우호단체들이 마련한 환영 만찬 연설에서 “위안화 환율은 경제적인 것으로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23일 보도했음. 그는 “중국은 미국, 유럽과는 무역흑자를 보고 있지만 한국 및 일본과는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미중간 무역불균형은 환율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음.



- 원 총리는 “중국은 지난 6월 19일 이후 변동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환율 개혁을 시작했지만 급속한 절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환율 개혁은 장기적으로 국내외 수요를 감안해 균형적으로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총리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압력이 강화되는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지만 양국 관계 개선과 협력에 대해서는 잇따라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음.
- 원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미국과 중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을 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양국 관계를 규정했음. 그는 “중·미 관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로서 불협화음을 우호와 협력으로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원 총리는 전날 미국의 기업, 금융, 학계인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에게 정식으로 방중 초청한 사실을 언급, 양국 군사교류가 조만간 복원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음.

● 美中 군사교류 조만간 재개(9/23)

- 올해 초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결정 직후 중단됐던 미국과 중국의 군사교류가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마이클 쉬퍼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양국간 군사대화 재개를 모색하기 위해 다음 주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임.
- 미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쉬퍼 부차관보가 군사분야 대화를 재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방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엔 총회 참석 차 뉴욕을 방문 중인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도 미·중간 군사교류가 조만간 복원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음.
-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뉴욕발 기사에서 원 총리가 22일(현지시간) 오전 미국의 기업·금융·학계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에게 적당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 달라고 이미 정식으로 초청했다”면서 “중·미 군사교류가 전향적으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23일 보도했음.
- 중국은 미국이 올해 초 대만에 대한 64억달러 규모의 무기판매를 결정하자 양국간 군사대화를 전격 중단했고, 지난 6월에는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중국 방문 제안도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거부한 바 있음. 이런 배경을 감안하면 원 총리의 이번 발언은 양국간 군사교류 재개의 분위기가 이제는 조성됐기 때문에 게이츠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군사교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이와 관련,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9일 브리핑에서 게이츠 장관이 중국 측 초청을 받아 연내에 방중할 수도 있다고 밝혀 양국이 군사교류 재개를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음. 중국과 미국은 최근 양국의 고위 관리를 상호 파견해 양국간 관계 개선을 모색해 왔으며 중국 지도부도 양국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음.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원 총리는 이달 초 방중한 래리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토머스 도널런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직접 만나 양국 관계의 중요성과 대화 및 교류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음. 원 총리는 실제로 이번 방미 기간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는 표면적으로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양국이 경제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며 미·중간 관계 개선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원 총리는 미국 재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미국의 산업적 이해관계는 불가분하게 연결돼 있다”며 미국이 강력하고 안정된 중국을 원하듯 중국도 같은 상태의 미국을 원한다고 말해 양국간 경제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음. 원 총리는 그러면서 “최근 양국간 경제무역 문제에서의 갈등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 中 외교백서 “중미관계 가장 중시”(9/20)

- 중국 정부는 외교정책 기조를 담은 2010년 외교백서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외교부는 금년도 외교백서를 발간 권한을 홍콩의 문회보(文匯報)에 넘겼으며, 문회보는 조만간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문회보가 미리 입수한 백서 내용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외교백서를 통해 세계 각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중미관계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중미관계가 양호한 발전국면을 맞고 있다고 평가했음.
- 외교백서는 중국과 미국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교류와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중요한 국제문제에 있어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외교백서는 중미관계의 전략적 의미와 글로벌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2009년 양국간의 주요 외교현안으로 대만, 티베트 및 신장(新疆)위구르, 경제 및 무역, 인권과 종교문제 등을 꼽았음. 중국 정부는 이들 미국과의 외교현안에서 국가주권을 지키고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한다는 원칙에 따라 미국의 잘못된 언행과 행동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했으며, 미국이 중국의 내정 문제에 간섭하려는데 대해 단호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외교백서는 주장했다.
- 외교백서는 또 중국외교를 정상외교, 경제외교, 대국외교, 주변외교 등 9개 분야로 구분한 뒤 2009년 중국 외교는 대내적으로 ‘성장을 유지하고(保增長), 민생을 보호하고(保民生), 안정을 유지하는(保穩定)’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가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심화발전시켰다고 평가했음.



관점에서 볼 때 사죄나 배상은 상상할 수 없다”서 거듭 “중국의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간 총리는 아울러 일·중 간 갈등이 첨예해지는 데 대해 침착한 대응을 촉구하고 “양측이 더 폭넓은 관점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는 또 중국인 선장 석방 조치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사건의 성격을 철저히 따지고, 국내법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음. 일본 외무성은 앞서 25일 사토 사토루(佐藤 悟) 외무보도관 명의의 담화를 내고 “중국 측 요구는 어떤 근거도 없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일단 중국인 선장은 석방됐지만 이처럼 중국과 일본이 사죄와 배상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센카쿠(다오위다오) 갈등이 계속되는 양상임. 한편, 일본 경찰은 26일 오전 나가사키(長崎)시 중국 총영사관에 조명탄으로 보이는 물체가 날아든 사건이 최근 영토분쟁과 관련된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음.

● <日 ‘센카쿠 비디오’ 공개 고심>(9/26)

- 일본이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분쟁과 관련해 해상보안청이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공개할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음. 문제의 비디오테이프는 지난 7일 센카쿠 열도 부근 해상에서 벌어진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충돌 장면을 담은 것. 일본은 사건 초기 “비디오테이프를 보면 중국 어선이 고의로 일본 순시선을 들이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테이프 공개를 시사하며 공세를 벌인 적도 있음.
- 하지만 이후 중국이 “작은 어선이 규모가 훨씬 큰 순시선을 들이받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상황을 유도한 것 아니냐”며 테이프 공개를 요구하자 소극적인 자세로 바뀌었음.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수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증거를 공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의 처분이 내려진 뒤에나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태도가 이처럼 바뀐 데 대해 정권 핵심부가 당시 고조되는 양국의 갈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공개를 막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음.
- 일본이 다시 비디오테이프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것은 24일 중국인 선장을 석방한 뒤에도 중국이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등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으면서부터. 일본 내 여론은 급격히 나빠지고 “왜 비디오테이프를 공개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높아졌음. 급기야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간사장은 26일 오전 NHK에 출연해 “(비디오테이프를 국회에 제출하는 문제를) 잘 상담해보겠다”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음.
- 오카다 간사장의 이날 발언은 비디오테이프 공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됐음. 다만 고민은 테이프를 공개한 뒤 중국 어선이 순시선을 고의로 들이받은 게 명백해질 경우 일



본 내에서 “그럼 중국인 선장을 왜 석방했느냐”는 여론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 지지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의 한 간부가 “(테이프를 공개 하면) 국민이 격분할 수도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하는 등 당내 의견은 여전히 엇갈린 상태임.

● <中, 日에 강한 양면전략 쓸 듯>(9/25)

- 중국이 다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문제로 심각한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에 대해 앞으로 강한 양면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됨. 초강수 조치로 일본을 몰아세운 중국이 이번 기회를 활용, 압박 공세를 강화하면서도 물밑으로는 대화와 협상을 병행해 양국 관계의 갈등 봉합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임.
- 우선 일본이 중국 선장을 조건 없이 전격 석방함에 따라 양국 간 갈등은 일단 중국의 판정승으로 굳어지는 가운데 중국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오위다오 영유권 주장 목소리를 높이면서 대일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일본에 억류됐다 풀려난 선장의 귀국 직후 중국이 외교부 성명을 통해 일본 측 조치의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공식적인 사과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배상을 추구하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됨.
- 중국 외교부는 25일 성명에서 “중국 어선과 선원에 대한 구금과 조사를 포함한 일본의 모든 사법조치는 불법적이고 효력이 없는 것”이라면서 “일본은 이번 사건에 대해 반드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중국이 일본에 공식 사과와 배상을 촉구한 것은 일본 측을 더욱 몰아세워 국제사회에서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됨. 이번 갈등을 계기로 중국이 다오위다오 분쟁과 관련한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 같은 분석과 맥을 같이함.
- 특히 다오위다오가 본래 명·청조 시대부터 대만에 부속된 중국 영토였는데 청일전쟁 외중인 1895년에 일본에 빼앗겼고, 세계 제2차대전에서 일본의 패망에도 다시 일본의 실효적인 지배로 넘어갔다는 데 중국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분석임. 이런 점에서 중국이 그동안 죄어온 고삐를 쉽게 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음. 중국은 일본과의 고위급 회담을 전격 취소하고 희토류 수출 중단과 일본인 연행 등 보복에 가까운 극단조치를 강행했기 때문에 이미 내보인 카드를 쉽게 거두지 않고 이를 통해 ‘실리’를 챙길 것이란 분석임.
- 그러나 중국은 일방적인 대일 압박전략만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표면적으로는 대일 압박 전략을 구사하면서도 물밑으로는 대화 협상을 통해 갈등 완화를 모색한다는 것. 중국 외교부 성명을 보면 이 같은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음. 외교부는 25일자 성명에서 일본 측의 사과와 배상을 추구하고자하면서도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겨뒀음.
- 외교부는 “중일 양국은 이웃국가로서 전략적 호혜관계를 지속적으



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양국 간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 관계의 큰 흐름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 대화를 통한 관계 회복 모색 가능성을 열어줬음.

-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당분간 자국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는 일본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 개선과 갈등 봉합 수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음.

● 중국인 선장 귀국..中, 사과·배상 요구(9/25)

- 닌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주변 영해 침범 혐의로 일본에 의해 구속됐다 석방된 중국인 선장이 25일 귀국했음.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당국이 전날 석방한 중국인 선장 잔치슝(詹其雄.41)이 이날 오전 4시(현지시간)께 중국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 편으로 푸젠(福建) 푸저우(福州)시에 도착했다고 발표했다. 전세기에는 중국 외교부와 농업부 관계자가 함께 탑승했으며 후정웨이(胡正躍) 외교부 부장조리와 홍제쉬(洪捷序) 푸젠성 부성장이 직접 공항에 나와 그를 영접했음.
- 잔치슝 선장은 중국 언론의 취재 속에 공항 도착 직후 관영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무사히 귀국할 수 있게 한 당과 정부의 보살핌과 국민의 관심에 매우 감사한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그는 “일본이 나를 구속한 것은 불법적인 조치이며 닌오위다오는 중국 영토”라면서 “나는 정부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음.
- 그는 다른 선원 14명과 함께 지난 7일 닌오위다오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다 일본 측에 의해 나포돼 구속됐으며 나머지 14명이 석방된 뒤에도 계속 구금 상태에 있다 17일만에 귀국할 수 있게 됐음. 일본 사법당국은 그에게 단속에 나선 자국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했지만 그는 조사과정에서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각종 조치를 통해 일본을 압박해 온 중국 정부는 선장의 석방 조치 직후에도 잇따라 성명과 논평을 발표해 일본의 자국 어선 나포가 불법이라며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국은 외교부 명의의 성명을 통해 “닌오위다오와 부속 도서는 오래전부터 중국 고유의 영토로 중국이 주권을 보유한 곳”이라면서 “중국 어선과 선원에 대한 구금과 조사를 포함한 일본의 모든 사법조치는 불법적이고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음. 이에 따라 중국은 “일본은 이번 사건에 대해 반드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중국 외교부는 이날 새벽 별도로 발표한 선장의 송환 조치에 관한 성명에서도 일본 법원의 ‘처분 보류’ 결정을 비롯한 모든 조치 역시 불법적이며 무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중국은 그러나 “중일 양국은 이웃국가로서 전략적 호혜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한



다”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양국간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 관계의 큰 흐름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 대화로 인한 관계 회복 모색 가능성을 열어줬음.

- 한편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중국인 선장 석방이 국내법에 따라 양국의 유익한 관계 증진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의미를 부여했음. 간 총리는 “어떤 경우라도 중국과 일본은 중요한 이웃이다. 또 우리는 전략적 이해에 기반을 둔 상호 유익한 관계 강화 차원에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임무를 안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일본과 중국이 차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음.

● 日 “中, 동중국해 가스전 단독 굴착” 의심(9/25)

- 중국인 선장 석방으로 센카쿠(尖閣)열도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한 일본이 이번에는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문제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음. 25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중국이 최근 시라카바(중국명 춘샤오<春曉>) 가스전에 반입한 장비가 굴착용 파이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음. 일본은 중국이 굴착 공구를 해저에 연결하는 파이프를 반입한 것을 두고 이미 단독으로 가스전을 뚫기 시작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며 만약 사실이라면 일본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경제산업성은 굴착용 파이프가 매일 늘었다가 줄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중국이 실제로 이를 이용해 굴착을 하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변 해수면의 색깔이 변하는 등 (굴착을 개시했다는) 정황 증거는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시라카바 가스전은 중국과 일본이 각자 설정한 배타적경제수역(EEZ)에 걸쳐 있어 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임. 양국은 2008년 6월 공동으로 가스전을 개발하기로 합의한 뒤 공동 개발 조약을 맺고자 협상을 벌이는 동안 굴착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음. 하지만 중국이 최근 센카쿠 갈등이 불거진 뒤 가스전 협상 중단을 선언하자 일본은 중국이 단독으로 굴착 작업을 벌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며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음.

● “日, 중일 총리회담 추진” <日紙>(9/25)

- 일본이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부근 해역에서 붙잡았던 중국인 선장을 석방한 것을 계기로 중일 총리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음. 신문에 따르면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미국 뉴욕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정하기 시작했음. 앞서 중일 양국은 유엔총회 참석 기간에 총리회담을 여는 방안을 논의하다가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갈등을 계기로 회담을 뒤로 미뤘음. 일본은 24일 중국인 선장을 석방한 것



을 계기로 총리회담을 개최해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의도지만 중국이 선뜻 응할지는 불투명함.

● 日정부 “中선장 석방은 검찰의 독자판단”(9/24)

- 일본 정부는 검찰의 중국인 선장 석방과 관련,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 검찰의 독자적인 사법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24일 오후 오키나와(沖繩) 나하(那覇)지검의 중국인 선장 석방 결정과 관련해 “나하지검이 형사소송법 본래의 취지에 의거해 석방 결정에 도달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 이번 결정이 중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임. 센고쿠 관방장관은 이어 “(중국 선장의 구속으로) 일중 관계에 악화 징후가 보인 것은 사실이다”면서 “다시 전략적 호혜 관계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야나기다 미노루(柳田稔) 법무상도 “법무상으로서 (검찰이 중국 선장을 석방하도록) 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서 “나하지검의 판단에 대해서는 법과 증거에 기초한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간사장 역시 “검찰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법에 기초해 엄정하게 판단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 그는 “검찰 본래의 판단이 외풍으로 왜곡됐다고 보는 견해가 국익에 오히려 해가 된다”고 강조해 정치적 판단으로 중국인 선장을 석방했다는 일각의 견해를 일축했다.

● <中, 닌오위다오 갈등서 일단 승리>(9/24)

- 중국과 일본간 닌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가쿠<尖閣>열도) 갈등이 중국의 승리로 굳어지는 기색이 역력함. 일본측이 24일 그간 갈등의 핵심이었던 중국 어선 선장에 대해 조기 석방의사를 밝히고 나선데서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하게 감지됨.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런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음.
- 일단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자국 어선 선장인 잔치슝(詹其雄.41)씨를 “항공기를 보내 잔씨를 귀국시키겠다”고만 밝혔다. 이를 두고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의중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나서 논평을 내놓을 것으로 점치고 있음. 선장 석방이라는 1차적 요구는 달성된 만큼 일본과의 물밑 협상을 통해 추가적인 ‘획득물’을 챙기려할 것이라는 분석임.
- 일각에서는 지난 2주간 닌오위다오 갈등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정치·경제적인 대일 압박과 효과적인 여론전으로 닌오위다오를 국제분쟁지역화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고 이제는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이번 갈등을 계기로 닌오위다오 분쟁과 관련한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



는 분석도 내놓고 있음. 특히 다오위다오가 본래 명·청조 시대부터 대만에 부속된 중국 영토였는데 청일전쟁 와중인 1895년에 일본에 빼앗기고서 세계 제2차대전에서 일본의 패망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본의 실효적인 지배로 넘어갔다는데 중국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임.

- 사실 다오위다오를 실효 지배하는 일본 정부가 이번에 중국 어선과 선장을 나포해 자국 법에 따라 기소와 판결을 하려는 시도를 중국 정부가 일단 강수를 뒤 차단한 점은 적지 않은 성과라는 게 중국 내부의 평가임. 그러나 중국 국민의 감정은 여기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중국 정부로서는 이 참에 다오위다오 분쟁과 관련해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얘기임. 따라서 중국이 그동안 죄어온 고삐를 쉽게 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음.
- 그동안 일본 정부의 고위급 외교 제의를 일축하면서 공개적인 대일 비난에 나서는가 하면 사실상 경제보복에 가까운 극단조치를 강행해 온 중국이 기존의 입장을 하루 아침에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기왕 내보인 카드로 ‘실리’를 챙기려 할 것이라는 분석임.
- 우선 주목되는 것은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재개할 지 여부라고 할 수 있음. 아이팟과 전기자동차, 미사일 등 각종 전자제품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경우 중국은 전 세계 생산량의 97%를 차지하고 일본은 사실상 전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임. 중국이 지난 7월 일본에 대한 올해 희토류 수출량을 지난해보다 40% 적은 3만t으로 제한한데 이어 이번 다오위다오 사건을 계기로 지난 21일부터 수출을 아예 중단하자 일본은 충격에 빠졌음.
- 현재 진행중인 중국의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 도요타 자동차의 뇌물혐의 벌금 부과사건과 중국 국가안전국의 군사시설 불법촬영 일본인 연행사건의 항배도 중국 정부의 의지를 알 수 있는 풍향계라는 지적임. 두 사건 모두 중국 정부는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영업행위이고 불법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임. 특히 눈여겨 봐야 될 점은 중국이 이미 선언한 정부간 교류 중단 조치에 대한 입장 번복 여부라는 지적임. 중국은 다오위다오에서의 중국어선 나포사건 이후 일본과의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협상을 중단하고 시라카바(白樺, 중국명 춘샤오<春曉>) 가스전 독자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는가하면 각료급 교류 중단, 항공노선 증편 협상 중단, 석탄관련 종합회의 연기 등을 선언한 바 있음.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중국 선장을 석방하지 않은 채 중일 고위급 회담을 하지는 것 자체가 속임수라고 했던 만큼 이와 관련한 입장 변화 여부가 중요하다”며 “중국 정부의 논평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 日야권, 中 선장 석방에 ‘굴복외교’ 반발(9/24)

- 자민당 등 일본의 보수 야당들은 24일 정부의 중국인 선장 석방과 관련, 외교적 패배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제1 야당인 자민당 등은 지난 7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중국 어선 선장 잔치승(詹其雄.41)씨를 구속한 오키나와의 나하(那覇)지검이 이날 ‘처분보류’로 잔씨를 석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음.
-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매우 어리석은 판단이다. (중국 어선이) 영해를 침범한 것이 명명백백함에도 중국의 압력에 정치가 굴복했다”고 주장했다.
-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조회장은 “간 나오토 총리와 마에하라 세이지 외상이 미국 방문으로 부재중이다. 어떤 판단에서 (중국인 선장 석방) 결정이 이뤄졌는지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다함계당의 와타나베 요시미(渡邊喜美) 대표는 “명백한 외교적 패배다”면서 “간 총리의 약체외교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격했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무성으로부터 처분보류로 중국 선장을 석방한다는 보고를 받고 그 판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센고쿠 관방장관은 이어 “(중국 선장의 구속으로) 일중 관계에 악화 징후가 보인 것은 사실이다”면서 “다시 전략적 호혜관계가 충실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 중국인 선장을 구속했던 나하지검은 이날 선장을 석방하기로 결정한 뒤 “일본 국민에 대한 영향과 향후 일중 외교관계를 고려했다”고 발표했다.

● <日, 중국 압력에 ‘센카쿠 갈등’ 백기>(9/24)

- 2주 이상을 끌었던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갈등이 일본의 ‘항복 선언’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일본이 센카쿠열도 부근 영해를 ‘침입’한 중국 어선을 일본 법률에 따라 사법처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음.
- 5개의 무인도와 3개의 암초로 이뤄진 센카쿠열도는 대만에서 북쪽으로 185km, 오키나와에서 서쪽으로 420km 떨어져 있어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는 일본보다는 중국에 가까운 섬임. 하지만 일본이 청일전쟁 외중인 1895년 1월14일 센카쿠열도를 오키나와(沖繩)현에 편입했다고 주장했고, 중국과 대만은 불평등조약인 시모노세키조약 탓에 일본에 뺏겼다고 맞서면서 영유권 갈등이 시작됐음.
- 이 섬에 중국, 일본, 대만의 눈길이 집중된 것은 1970년대 들어 해저에 석유 등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임. 중국은 1992년 댜오위다오를 자국 영토에 편입하는 영해법을 발표했다. 즉 일본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는 해도 명백히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셈임. 중국인 활동가 7명이 2004년 3월 센카쿠 열도의 일부인 우오쓰리지마(魚釣島)에 상륙했을 때 일본이 이들을 체포했다가 사법처리를 하지 않은 채 이들 만에 추방하는 데 그친 데에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음.

- 이후 보수화 색채가 강화된 일본은 지난 7일 센카쿠 열도 구바지마(久場島)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선장과 선원 15명을 붙잡아 조사했음. 이후 선원 14명은 13일에 석방했지만 선장 잔치슌(詹其雄.41)씨는 8일 구속한 데 이어 19일 구속기간을 열흘간 연장했고, 중국의 거듭된 항의에도 “(일본) 사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수사를 끝낸 뒤 재판에 넘겨 판례를 남기겠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셈. 중국은 이를 일본이 센카쿠열도의 영유권 논쟁에 못을 박으려고 시도했다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임.
- 팡중잉(龐中英)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23일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측의 대응이 강경해진 이유를 “일본측에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현상을 바꾸려고 하는 의사가 엿보이기 때문”이라며 “섬(센카쿠열도) 부근 해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일본의 국내법으로 재판해 판례를 남기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는 커다란 압력이다”라고 말했음.
- 중국은 이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보였고, 일본 관광 축소와 희토류 수출 금지, 일본인 구속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했음. 일본은 결국 지검의 ‘처분 보류’ 결정이라는 형식을 빌리긴 했지만 29일 구속 기한을 앞두고 중국인 선장을 석방함으로써 일본 국내법에 따른 기소와 판결이라는 선례를 남기는 데 실패했음. 보류 이상 구속했다는 점을 성과로 내세우기에는 일본 경제가 얼마나 중국의 보복에 취약한가를 뚜렷이 드러내 보였다는 상처가 크게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9월14일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승리해 새 내각을 발족시키자마자 첫 외교 시험대에서부터 백기 투항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내 보수 세력의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일본 국내에서는 벌써 “간 총리가 (집권당 내 경쟁자이면서 중국 인맥이 두터운)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전 간사장을 중국 특사로 기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이는 형편임.

● <中 전방위 日 압박..경제보복에 日 충격>(9/24)

- 중국이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에서 일본의 자국민 선장 체포와 구속에 대한 대응으로 정치·외교적인 압력을 넘어 직접적인 보복조치를 들고나왔음. 중국은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잠정 중단한데 이어 군사지역 촬영을 이유로 일본 민간인 4명을 구속했음. 중국은 일본에 센카쿠열도에서 지난 7일 체포한 자국 어선 선장을 ‘즉시 무조건’ 석방할 것을 ‘말’로 요구했으나 반응이



- 없자 실행행사에 나선 것임.
-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지난 21일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이 구속한 선장을 즉시 석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응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직후임.
 - ◇ 경제제재에 일본 충격 = 중국이 첨단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希土類, Rare earth) 수출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산업계는 큰 충격에 빠졌음.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중단을 부인하고 있지만 일본 언론은 24일 일제히 통관절차 등을 지연하는 방법으로 중국이 사실상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음.
 -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일단 선장 구속만료시한인 이달 29일까지 희토류 수출을 잠정 중단했으며 이후 수출 재개여부는 일본이 선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임. 공업의 ‘조미료’ 또는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는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자동차의 모터, 친환경 가전, 광자기 디스크, 금속가공과 의료장비에서 활용하는 레이저, 고(高)굴절 렌즈 등 첨단제품 생산에 없어서는 안될 희소 금속으로 세계 생산량의 97%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거의 전량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것은 일본 산업의 생명선을 차단한 것으로 첨단자동차와 가전제품에는 사활이 걸린 일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음.
 - ◇ 日 추가 보복 가능성에 전전긍긍 = 일본 정부는 일단 중국이 정말로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는지를 확인한 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의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추가 경제보복이 이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음. 이미 중국은 관광객의 일본 여행을 억제, 일본의 여행업계와 항공업계에 타격을 가하고 있음.
 - 중국의 건강용품 제조업체인 바오젠(寶健)사는 지난 17일 센카쿠 갈등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직원 1만명의 일본 관광 계획을 전격 취소했음. 또 베이징시 관광 당국은 지난 21일 여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일본 여행객을 모집하는 광고나 선전을 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음. 전문가들은 일본이 선장을 조기에 석방하지 않을 경우 중국이 보복공세의 수위를 점차 높여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신슈(信州)대 경제학부의 마카베 아키오 교수는 “중국 경제가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제 카드를 쓰기가 용이하다”면서 “제2, 제3의 화살(경제제재)이 발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음.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지금까지 중국과 일본은 정치·외교적 대립을 가급적 경제와 민간분야로 파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이번에 이 선이 완전히 무너진 셈임. 일본과 중국의 외교·정치·경제적 관계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지만 영토가 걸린 문제여서 어느 쪽도



양보가 어렵다는 점이 사태를 꼬이게 하고 있음.

- 일본으로서는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단속에 나선 자국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들이받은 혐의로 중국 어선 선장을 이미 구속했기 때문에 국내법 절차에 맡겨둘 수밖에 없는 상황임. 중국도 센카쿠열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일본이 선장을 풀어주지않는한 타협의 여지가 없다. 중일간 대화의 통로가 사실상 막혀버린 상태에서 상황은 갈수록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음.

● <日 센카쿠 딜레마..中 예상 넘는 강공에 당혹>(9/24)

-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싼 갈등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 일본인 맞불 연행 등 전방위로 번지자 일본이 해결 방안을 두고 머리를 싸매고 있음.
- ◇ 사태 악화 배경엔 ‘첫 판례’ 문제 = 일본이 센카쿠 열도 주변의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외국인을 이처럼 오래 가둔 것은 이번이 처음임. 2004년 3월 중국인 활동가 7명이 섬에 상륙했을 때에는 일단 체포를 하긴 했지만, 이를 만에 추방하는데 그쳤음.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당시 총리는 당시 회견에서 “일본과 중국 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국적 판단을 하라고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음.
- 내부적으로는 입국관리법상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긴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인 판단에서 특례 조치를 한 것이 분명했음. 2008년 6월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일본 해양 순시선이 대만 어선을 침몰시켰을 때에는 선원들을 곧 풀어준 것은 물론이고, 과잉 대응을 사과하고 배상까지 했음.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 8일 중국인 선장을 체포한 데 이어 열흘간 구속했으며 구속기간을 다시 열흘간 연장했음. 연장된 구속 기한은 29일까지. 이때까지는 풀어주든지 재판에 넘기든지 결정해야 함. 일본의 태도로 볼 때 이번 기회에 센카쿠 열도 부근에서 조업하는 중국인 선장을 일본 국내법을 적용해 유죄 판결하는 사례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중국의 대응을 한층 격화시키는 것으로 보임.
- ◇ 일, 예상외 강한 반발에 고심 = 일본은 선장을 구속한다고 해서 중국이 이 정도로 강하게 대응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음. 중국 정부가 만주사변(9.18 사변) 79주년 기념일인 지난 18일 중국 내 시위를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자 산케이신문 등 일본의 보수 신문은 ‘관제 데모’ 아니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음.
- 하지만, 중국이 중국인의 일본 관광을 통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희토류 대일 수출까지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자 중국의 진의 파악에 애쓰고 있음. 문제는 중국의 의도가 무엇이든 일본 입장에서선 사태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 무엇보다 일본이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고자 비자 발급 요건까지



완화했다는 점이나 희토류 수입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는 처지 등을 고려할 때 사태가 악화하면 경제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일본 언론에선 “중국이 보복책으로 일본 국채를 사들여 엔고 현상을 부채질할 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어린 보도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 또 센카쿠 열도를 실효 지배하는 입장에서 이 섬이 분쟁 지역으로 떠오르는 게 반가울 리도 없음.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이 22일 회견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며 고위급 회담 가능성을 내비친 것도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려는 뜻으로 풀이됨. 하지만, 중국이 일본의 이같은 손짓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선장을 석방하라”고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어 29일 중국인 선장의 구속 시한을 앞두고 일본의 고민도 점점 깊어지고 있음.

● 중국 “주권문제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9/24)

- 중국이 일본의 자국 어선 나포 사건에 대한 대일 압박 공세의 수위를 계속 높이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주권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중국 관변 전문가들이 23일 경고했음. 가오홍(高洪)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부소장은 이날 신화통신에 “중국이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일본은 이를 약점 노출로 받아들이고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음. 그는 중-일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구금된 중국어선의 선장을 즉각 무조건 석방하는 게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 지난 7일 중-일 양국이 영유권 분쟁을 일으켜온 동중국해 다오위다오(釣魚島) 부근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2척과 중국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난 뒤 일본은 어선과 선원들을 나포했음. 이와 관련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지난 21일 뉴욕에서 일본 측에 불법 억류한 중국인 선장을 조건 없이 바로 풀어줄 것을 촉구하면서 석방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음. 원 총리는 특히 다오위다오는 중국의 ‘영토’(sovereign territory)임을 강조하며, 일본의 불법 나포와 구금을 비난했음.
- 중국군사과학원 판가오웨(樊高月) 연구원도 “만일 사태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중국이 다음에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음.
- 국립 싱가포르대학의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인 정용넌(鄭永年) 전 국제 중국연구잡지 편집장도 중국이 외교와 경제 대응조치 모두를 검토할 것이라며 “일본 경제는 중국이 일본 경제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중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한편,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장관급 접촉 중단에 이어 이날까지 최소 20건의 문화 및 정치 등 분야의 교류가 영향을 받았음. 지난 19일 일본 간이재판소가 중국 어선 선장의 구류기한을 연장하자 중국은 즉각 일본과의 각료급 이상 고위급 교류를 중단시켰음.
- 중국 측은 또한 일본 청소년과 대학생 1천 명이 상하이 세계박람회



를 방문하는 것도 연기시켰음. 일중친선협회가 양국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내달 15일 베이징에서 열기로 한 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음. 또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우호협력 계약을 맺은 300여개 중국 도시들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최근 교류활동 취소를 통보한 상태임.

● 中, 日에 압박강화..속임수 중단 촉구(9/23)

- 중국이 일본의 자국 어선 나포 사건에 대한 대일 압박 공세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음.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직접 나서 일본 정부가 억류 중인 중국 선장을 무조건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중국 외교부도 외교 용어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강한 표현으로 일본을 강하게 몰아세우고 있음.
- 원 총리는 21일 재외 거주 중국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선장 잔치승(詹其雄.41)씨를 무조건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언급해 일본에 대한 압박 강도를 재차 높였음. 이어 중국 외교부는 22일 장위(姜瑜)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세상 사람들과 국제여론을 기만하는 속임수는 아무런 탈출구(활로)가 없다”며 외교부의 성명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강력한 표현으로 비난의 수위를 높였음.
- 장 대변인의 이 발언은 일본 정부 대변인인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이 22일 일본은 중국과 “가능한 한 빨리” 고위급 회담을 하기를 희망한다며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한 중국의 반응으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장 대변인은 “일본이 잘못을 바로잡아 무조건적으로 중국 선장을 석방할 때에야 비로소 양국관계의 추가적인 훼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선장의 석방이 양국 관계에 대한 논의의 전제 조건이란 점을 분명히 했음. 그는 또 “일본 정부가 다오위다오 해역에서 불법적으로 자국 어선과 어민을 억류한 것은 중일간 전략적 호혜관계의 정신을 엄중히 위반한 것”이라고 일본을 몰아세우며 “일본이 양국 관계를 진정으로 중시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중국 선장을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국에서는 일본이 동북 3성 지역을 침략한 만주사변(중국명 9.18사변) 79주년을 맞은 지난 18일 본토는 물론 해외의 화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반일 시위를 벌이는 등 중국의 반일 감정은 극에 달했고 일본의 화교학교들이 일본 우익세력으로부터 협박 전화나 편지를 받는 등 이번 사태는 심각한 양국 국민간의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중국은 다오위다오 해역을 비롯한 동중국해에 해상 주권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어업지도선(어정선)과 해군 함정을 파견,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양국간 해상에서의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음.



-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자국 어정선들이 나포 사건 발생 후인 지난 12~13일 닌둥해역에서 일본 함정 7척과 대치, 일본이 헬리콥터와 정찰기를 띄우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었다고 보도했음. 또 과기일보(科技日報)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동해함대의 모 호위함대가 민감한 지역인 동중국해의 춘샤오(春曉.일본명 시라카바<白樺>) 가스전 주변 해역을 순찰하던 중 10여시간 동안 일본 함대와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 釣魚島갈등 심화..日우익 “화교학교 폭파”(9/22)

- 중국과 일본이 닌둥해역(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尖閣> 열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의 화교학교들이 잇따라 일본 우익세력들로부터 협박 전화나 편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고베의 ‘중화동문학교’(中華同文學校)에는 지난 16일과 17일 연속해 9월 18일 학교를 폭파하겠다는 일본 우익세력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명보(明報), 문회보(文匯報), 신보(新報) 등 홍콩 신문들이 22일 보도했음.
- 중화동문학교는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 즉시 일본 경찰과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 협박전화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고 18일 오후 수업을 중단했음. 고베 중화동문학교는 청나라 말기인 1899년 일본에 망명중이던 계몽사상가 량치차오(梁啓超)가 설립한 학교로 현재 630여명의 화교 학생들이 재학중임.
- 이와 함께 요코하마의 ‘산수중화학교’(山手中華學校)에도 우익세력의 소행으로 보이는 협박편지가 배달됐다고 홍콩 신문들은 전했다. 편지에는 닌둥해역 갈등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인들은 일본에서 꺼져버려라’(中國人徒日本滾出去)라고 협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음. 요코하마 산수중화학교는 1898년 ‘중국의 국부(國父)’로 불리는 쑨원(孫文) 선생의 주도로 설립됐으며, 후진타오(胡錦濤) 주석도 지난 2008년 5월 방일시 이 학교에 들른 바 있음.
- 이밖에 도쿄중화학원, 오사카중화학원 등 일본 각지의 화교학교에도 비슷한 내용의 협박편지가 배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관 측은 일본 경찰에 대해 자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음.
- 지난 7일 닌둥해역에서 일본 해상당국의 중국어선 나포를 계기로 촉발된 중·일간 갈등이 양국 정부 차원의 대립을 넘어서 양국 국민간 감정싸움으로 격화되고 있는 양상임.

● 中 “유엔서 中·日 총리 회동 부적절”(9/21)

-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유엔 총회 참석기간에 간 나오토 일본 총리와 만나기에는 “분위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중국 외교부의 장위(姜瑜) 대변인이 21일 밝혔음. 장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유엔 총회기간에 중일 정상 간에 회동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음. 중일 양국 총리는 오는 21~23일 '유엔 새천년 개발목표 정상회의'와 제65차 유엔 총회에 참석할 예정임. 이들은 유엔 총회 참석기간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각각 별도의 정상회담을 할 예정임.

- 원 총리의 나오토 총리 회동 기피 발언은 중일 양국이 지난 7일 영유권 분쟁지역인 조어도(釣魚島. 중국명 дя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 <尖閣>열도) 부근에서 일본 순시선이 중국 어선 두 척을 나포한 사건 이후에 외교, 경제적 갈등을 지속하는 가운데 나온 것임.
- 장 대변인은 이어 "일본이 중국 어선 나포사건 이후 추가적인 양국 관계 악화를 막으려면 관건은 현재 억류 중인 중국 어선 선장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나포한 어선 두 척과 선원 14명을 이미 석방했으나 중국 어선 선장인 잔치슁(詹其雄.41)씨에 대해서는 지난 19일 억류기간을 10일 더 연장한 바 있음.
- 장 대변인은 아울러 동중국해의 춘샤오(春曉.일본명 시라카바<白樺>) 가스전과 관련해 "중국이 완전한 주권과 관할권을 가졌다"면서 "춘샤오 가스전에 대한 중국의 활동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춘샤오 가스전은 중·일 양국이 각자 설정한 배타적경제수역(EEZ)에 걸쳐 있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또 다른 분쟁지역으로 양국 간에 가스전 협상 작업이 진행돼 왔으나 이번 дя오위다오에서의 중국 어선 나포사건을 계기로 중국이 협상 중단을 선언했음. 중국은 최근에는 춘샤오 가스전 주변에 자국의 동해함대 소속 구축함 두 척을 보내 순찰활동을 펴고 있음.

● “中 구축함 2척, 춘샤오 가스전 주변 순찰”(9/21)

- 중국 동해함대 소속 구축함 2척이 최근 일본과의 분쟁지역인 동중국해의 춘샤오(春曉.일본명 시라카바<白樺>) 가스전 주변 해역에서 순찰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홍콩의 명보(明報)는 21일 일본의 한 신문을 인용해 중국 동해함대 소속 구축함 2척이 지난 19일 고위층의 명령을 받아 동중국해로 향했으며, 이 구축함들은 중국이 개발 중인 춘샤오 가스전 부근해역에서 순찰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음.
- 중국 구축함들의 춘샤오 가스전 부근 순찰 활동은 중국과 일본이 дя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부근 해역에서 발생한 일본의 중국 어선 나포 사건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음. 중국은 지난 2005년 9월 춘샤오 가스전을 개발할 때에도 2척의 구축함을 이곳에 파견한 바 있음. 춘샤오 가스전은 중·일 양국이 각자 설정한 배타적경제수역(EEZ)에 걸쳐 있어 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임.
- 중일 양국은 일본의 반발에 따라 2008년 6월 공동으로 가스전을 개발하기로 합의했으며, 중국 측은 공동 개발 조약을 맺기 위해 협상을



별이는 동안 굴착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음. 그러나 중국은 이번에 자국 어선 나포사건을 계기로 일본과의 춘샤오 가스전 협상 중단을 선언했음. 한편 명보는 일본의 한 국회의원이 오는 11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이전에 닌오위다오 갈등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음. 일본의 한 의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미 많지 않다”면서 “APEC 회의가 열리기 전에 중국과의 관계를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명보는 전했다.

● 中, 조어도 관련 대일 압박 강화(9/20)

- 중국이 일본의 중국어선 선장 억류기간 연장을 계기로 대일 압박공세를 강화하고 있음. 외교부의 왕광야(王光亞) 부부장은 지난 19일 오후 일본이 영유권 분쟁지역인 닌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가쿠 <尖閣>열도) 인근 해역에서 나포한 중국 어선 선장 잔치슝(詹其雄.41)씨에 대한 억류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기로 한데 대해 니와우이치로(丹羽宇一郎) 주중 일본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즉각 항의했음.
- 왕 부부장은 “일본측은 중국선장에 대한 불법적인 억류를 중단하고 무조건 석방하라”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은 이와 관련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후 일체의 결과에 대해서는 일본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이 만든 이번 사건으로 이미 중일 관계에 심각한 손상이 초래됐으며 향후 사태가 어떻게 발전될지는 일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 같은 날 외교부의 마자오취(馬朝旭)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일본의 억류기간 연장 조치를 비난했음. 앞서 중국 외교부는 송타오(宋濤) 부부장, 후정웨이(胡正躍) 부장조리에 이어 양제츠 부장, 그리고 외교실무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 외교부 유엔 담당의 류진민(劉振民) 부장조리가 일본 대사를 직접 불러 항의한 있음.
- 이런 가운데 잔씨에 대한 억류조치 연장을 계기로 중국 내에서는 반일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통신은 중국내 4억 네티즌이 가장 많이 찾는 인터넷상 최다검색어가 ‘닌오위다오’와 ‘잔치슝’이 되고 있으며 19일 일본정부가 잔씨에 대한 억류기간을 연장한데 대해 비난이 들끓고 있다고 소개했음. 특히 만주사변 79주년 기념일인 18일에는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과 선양(瀋陽)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반일 시위가 열렸음. 시위대는 베이징의 주중 일본 대사관과 선양의 일본 총영사관 등의 주변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와 “닌오위다오에서 물러가라”, “류큐(琉球.오키나와)는 중국 땅”, “9.18(만주사변일)을 제대로 기억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일본을 압박했음.
- 중일 양국간 닌오위다오 갈등은 이미 경제 등 다른 분야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음. 중국 정부는 닌오위다오 갈등을 이유로 일본과의 부



장(장관)과 그 이상의 정부 고위직 간의 교류를 중단키로 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양국간 항공편 증편 논의 중단, 그리고 석탄분야 협력 회동도 연기하기로 했음. 중국은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 조약 체결도 연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日, 중국의 선장 조기석방 요구 불응키로”(9/20)

- 일본 정부는 센카구<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제도에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나포한 중국 어선의 선장을 조기에 석방하라는 중국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음. 이 신문은 외무성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일본이 중국 선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한데 대해 중국 외무부가 보복조치를 언급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로서는 국제법에 의거해 엄정히 대응할 뿐이며 타협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음.
- 중국 외무부의 왕광야 상무부부장은 19일 밤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郎) 주중 일본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 측이 즉시 중국인 선장을 석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음. 일본 정부는 중국 선장에 대한 조치와 관련, 법에 의한 엄정한 대응을 해나가면서 중국 측에 냉정한 대응을 촉구하기로 했음.
- 일본의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토교통상은 19일 방송에 출연해 중국이 자국 어선 선장의 구속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동중국해 가스전의 단독개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중국이 단독개발을 강행할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제소나 일본 기업의 독자굴착 등의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음.
- 일본 언론은 중국의 반발이 장기화할 경우 10월 하순 예정된 아세안 정상회의, 11월 일본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의 중일 정상회담 개최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바. 중·러 관계

● 러시아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9/26)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26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에 도착, 사흘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음.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 방문에 이어 이날 저녁 베이징에 도착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7일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방안과 함께 한반도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들이 말했음.
- 중·러 간의 이번 정상회담은 최근 한반도 정세의 긴장 완화 움직임 속에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고 북한의 후계구도 문제 등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열려 논의 내용이 주목되고 있음.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오는 28일까지의 방중기간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우방귀(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지도부와 잇따라 회동을 하고 에너지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러시아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방중 기간 러시아 원유의 중국 공급을 위한 협약 등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10여 건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어 28일 상하이 엑스포 전시장을 방문, 러시아 국가관의 날 행사에도 참가하고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과 회담할 계획이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방문에 앞서 다렌에 도착, 뤼순(旅順)의 옛 소련군 열사 묘를 참배하고 제2차대전 승리를 축하하는 전승 65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한 후 다렌 외국어대학을 방문, 학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했다. 뤼순은 러시아가 청나라 말기인 1898년 강점, 1905년 러일전쟁에서 패배할 때까지 7년간 군사기지로 사용했으며 1945년 제2차대전 승리 당시 연합군으로 참전한 옛 소련이 이 일대 주둔 일본군을 격퇴한 곳임.
-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취임 직후인 2008년 5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며, 후진타오 주석도 지난 5월 옛 소련의 2차대전 승리를 축하하는 전승 65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했었다. 양국 정상은 지난 6월에도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기간 별도의 회담을 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었다.

사. 기 타

● 중국방부장, SCO합동군사훈련장 방문(9/24)

- 중국의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이 23일(현지시간) 상하이협력기구(SCO)의 반테러 연합훈련인 '평화의 사명 2010' 훈련이 펼쳐지는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다고 24일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국방부장이 외국군과의 합동훈련을 벌이는 현장을 찾는 것은 이례적임. 량 부장의 카자흐스탄 방문에는 류푸련(劉福連) 베이징(北京)군구 정치위원과 차오중신(趙忠新) 공군부사령원, 첸리화(錢利華) 국방부 외사관공실 주임 등이 수행했었다.
- 이 훈련은 SCO 5개국의 5천명 병력이 참가해 공중전투 훈련외에 적 포위 및 압박, 야밤 적 강습 등 육상훈련을 병행하고 있으며 오는 25일까지 실시된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중국은 자국 본토에서 전투기와 폭격기 6대를 발진시키고 조기경보기 지원과 공중급유 훈련을 병행 실시하는 등 첫 월경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SCO의 이번 훈련이 테러방지 이상의 군사훈련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음.
- SCO는 중국과 러시아 이외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나 우즈베키스탄은 이번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음. 중국의 관영 통신과 방송, 신문매체들은 연일 훈련 모습을 생생한 화면과 함께 전하고 있음.

● 中 “SCO, 절대 군사동맹으로 발전 안해”(9/24)

- 중국은 22일 자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4개국도 가입한 상하이 협력기구(SCO)는 절대로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음. 카자흐스탄에서 실시중인 SCO의 반테러 합동훈련인 ‘평화의 사명 2010’에 참가중인 중국인민해방군의 외사판공실 부주임 츠귀웨이(慈國巍) 소장은 SCO의 반테러 합동훈련은 8년만에 시스템화·규범화되는 단계로 발전했고 회원국간 안보협력의 전망이 크게 좋다고 평가하고 이같이 다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음.
- 중국측 지휘부의 부총지휘인 츠 소장은 7번째인 평화의 사명 훈련은 그동안 ▲ 대형화 ▲ 훈련지역 확대 ▲ 훈련 내용 다양화 ▲ 시스템·규범화로 발전, 회원국 모두에 수확이 컸다고 평가하고 특히 회원국 상호간 신뢰가 증진하고 합동군사훈련 내용이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군은 이번 훈련에 첨단 전투기인 쟈(殲)-10을 비롯해 헬리콥터 등을 대거 투입했고, 특히 이번 훈련기간 처음으로 본토에서 발진한 전투기와 폭격기가 장거리 비행으로 카자흐스탄 훈련장에 도착, 기습 폭격훈련을 실시해 주목을 받았음.
- 25일 끝나는 이번 대테러 합동훈련은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SCO 5개 회원국에서 5천여명이 참여했음. SCO는 2007년 러시아 첼랴빈스크 지역의 체바르쿨 훈련장에서 평화의 사명 훈련을 한 바 있으며 이번이 7번째 대테러 합동훈련임. SCO는 2001년 6월 상하이에서 우호 증진, 협력관계 구축, 역내 평화·안보·안정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출범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회원국 이외에 이란, 인도, 몽골, 파키스탄이 옵서버로 있음.

● <서울 국제회의 빠지는 中·러시아 관료들>(9/23)

- 최근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중국과 러시아 정부 인사들이 잇따라 빠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국내 국책연구기관이 한반도 관련 국제회의에 중국과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하고 있지만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회의 의미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외교통상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이 내달 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1세기 핵 도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국제문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불참할 예정임. 특히 이번 행사의 제1회의에 한국에 있는 주요국 대사들을 초청해 핵안보정상회의에 관해 토론할 계획이었는데 중국과 러시아 측은 일정상 이유를 들면



서 불참을 통보해왔음.

- 장신선 주한 중국대사 측은 내달 중국의 주요 명절인 건국기념일 연휴와 겹치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고 외교안보연구원에 알려왔고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 측도 “다른 일정 때문에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음. 이에 따라 이날 외교라운드 테이블은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 스칸드 란잔 마얏 주한 인도대사, 백지아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만 참석할 예정임.
- 또 제2회의와 제3회의에 참석하는 중국과 러시아 인사들은 진찬룡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레오니드 라비킨 러시아 세계안보군축과학자협회 사무총장 등 민간 전문가 2명 뿐임. 앞서 통일부와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이 지난 8~10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를 주제로 ‘1.5트랙(반관반민)’의 협의체인 ‘코리아글로벌포럼(KGF)’을 개최했을 때도 양국 정부의 관계자들은 보이지 않았음. 주최측은 당시 중국과 러시아 정부의 아시아담당 국장과 부국장을 초청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는다”며 참석을 거부했다는 후문임.
- ‘코리아글로벌포럼’에는 미국의 성김 6자회담 특사,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일본의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대사 등 11개국의 전·현직 정부인사와 민간전문가 등 모두 21명의 대표단이 참석했음. 당시 중국에서는 진찬룡 교수 한명만 참석했고 러시아에서는 민간측 인사 2명이 나왔음.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참석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천안함 사태 이후 한국과 불편한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특히 중국 정부가 한·미 서해 군사훈련에 반대를 선언한 7월 초부터 국제 학술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관계자들을 만나기 어려워졌고 한·중 양자회의가 취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전언임.
- 이와 관련, 국내의 한 국제문제 전문가는 23일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긴장구도가 생길수록 중국, 러시아가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것이 더 좋을텐데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 “러, 천안함 보고서 한국에 안 넘길 것”(9/22)

- 러시아는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한국 측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차관이 21일 밝혔다.
- 러 외무부 아태지역담당 차관이자 북핵 6자회담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보로다브킨은 이날 오전 모스크바 시내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 전문가들의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축사를 한 뒤 ‘러시아 정부가 언제 천안함 보고서를 한국 측에 전달할 것인가’라는 연합뉴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음.
- 보르다브킨 차관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러시아 조사단의 보



- 고서는 당초 국가 지도부를 위해 내부용으로 작성된 비밀문서로 러시아 정부는 이를 한국이나 북한 어느 쪽에도 전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천안함 사고의 원인을 따질 때가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기”라며 “이를 위해 6자회담 재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보로다브킨은 그 전제조건으로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이 (공격적) 수사를 낮추고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함으로써 사태를 진정시키는 한편 어떤 조건하에서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을지를 외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러시아는 자국 해군 소속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자체조사단을 지난 6월 1일부터 1주일 동안 한국에 파견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자체 조사를 벌인 바 있음.
 - 보르다브킨 차관은 이에 앞서 측사에서 “천안함 사태로 수십년 동안 지속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최악의 수준에 달했다”며 “더이상의 긴장 고조는 갈등과 충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음. 차관은 이어 “위기의 책임은 남북 양측에 함께 있다”고 전제하고 “북한은 2009년에 2차 핵실험을 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 참여했어야 했으며 천안함 사태 이후 미국과 남한이 한반도 인근에서 군사 활동을 증가시킨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음.
 - 한편 이날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북핵 문제와 천안함 사건 등으로 야기된 한반도 긴장 사태와 관련, 러시아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작성한 보고서 발표가 있었음. ‘한반도: 러시아에 대한 도전과 가능성’이란 제하의 보고서는 러시아 정부 산하 재단 ‘루스키 미르(러시아의 세계 혹은 평화)’의 바체슬라프 니코노프 사무총장,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로 같은 재단의 게오르기 톨로라야 국제협력국장, 알렉산드르 제빈 극동연구소 한국연구센터장, 이고리 사기토프 외무부 아주1국 참사관 등 9명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작성했음.
 - 보고서는 “천안함 사태는 남북한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 사이의 관계도 악화시키는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으며, 지금의 한반도 주변 상황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 간 대결이 펼쳐지던 냉전 시절을 연상시킬 정도가 됐다”며 관련국들의 조속한 사태 해결 노력을 촉구했음. 보고서는 또 “천안함 침몰로 야기된 위기는 상당 부분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고립과 체제 약화, 최종적으로는 ‘항복’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유례없는 압력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일련의 의도적 조치를 취한 결과”라고 분석했음.
 - 북핵 사태 해결 방안과 관련, 보고서는 “현 시점에서 (6자)대화의 중심에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의제로 올려놓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비핵화라는 먼 미래를 지향하면서도 당장은 북한의 추가적 핵개발을 중단하게 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고서는 또 “북한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북한에 친(親)



중국 체제를 세우려할 것”이라며 “북한의 통치 엘리트들도 남한에
향복하는 것보다 이 길을 더 선호할 수 있다”고 예상했음. 보고서는
이어 “6자회담에서 러시아가 미국, 중국, 남한에 가치가 있는 것은
러시아 정부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러시
아는 한국뿐 아니라 북한과도 정상적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고 자국
정부에 등거리 외교를 주문했음.



[참고 1] 〈中·日, 센카쿠 갈등 일지〉(9/24)

지난 7일 동중국해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부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이 충돌한 것을 계기로 불거진 양국간의 충돌은 24일 일본이 압력에 굴복해 중국인 선장을 석방하기로 함으로써 일단락됐다. 다음은 7일부터 24일까지 18일간에 걸친 양국간의 대립을 정리한 일지.

- ▲9월 7일 = 센카쿠 열도의 구바지마(久場島) 인근 해상에서 중국 저인망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요나쿠니호, 미즈키호와 잇따라 충돌.
- ▲9월 8일 = 일, 중국 어선 선장 잔치슝(詹其雄.41)씨 체포. 선원 14명도 조사.
- ▲9월10일 = 일, 잔 선장 구속.
- ▲9월11일 = 중,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에 관한 중일 조약 체결 교섭을 연기하겠다고 발표.
- ▲9월12일 = 중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 새벽에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郎) 주중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
- ▲9월13일 = 일, 선원 14명 석방. 귀국
- ▲9월17일 = 일, 중국이 동중국해 가스전에 굴착 작업용 드릴로 보이는 기재를 반입했다고 발표. 중국 건강용품 제조업체인 바오젠(寶健)기업, 직원 1만명 일본여행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밝힘.
- ▲9월18일 = 베이징·상하이·선양·선전 등지에서 반일 시위.
- ▲9월19일 = 일 법원, 잔 선장 구속기간 29일까지 열흘간 연장. 중, 각료급 이상의 교류 중단 등 조치 발표.
- ▲9월20일 = 중, 일 대학생 1천명 상하이엑스포 초청 연기 통보.
- ▲9월21일 = 중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선장을 즉시 무조건 석방하라고 요구. 추가 조치 언급.
- ▲9월23일 = 미 뉴욕타임스 인터넷판 “중국이 희토류 일본 수출 금지” 보도. 신화통신, 일본인 4명이 허가 없이 중국 군사시설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
- ▲9월24일 = 일 검찰, 잔치슝 선장을 ‘처분 보류’ 후 석방하기로 했다고 발표.

chungwon@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09/24/0503000000AKR20100924167600073.HTML>